

# 개인정보보호 통합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정보를 포함한다.
  - 가. "개인위치정보"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위치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나.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개인을 식별하여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다. "개인금융거래정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라. "개인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의 검진 또는 진료 등의 과정에서 얻은 개인의 신체상태, 질병, 치료, 처방, 과거병력, 가족병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마. "학생교육정보"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4조·「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에서 얻은 학생들에 대한 성적·생활정보·건강정보 등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학생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바. "바이오인식정보"란 얼굴·지문·홍채·정맥·동작·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정보와 그

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정보를 포함하되, 다만 추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특징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원본정보는 제외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보관,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배달, 우송, 공개, 삭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 목적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사람이나 사업자를 포함한다.
  - 가. 공개된 장소의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 나. 방송·통신·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하여 업무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온라인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한다)
  - 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합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
  -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같은 조 제7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합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
  - 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의 금융회사, 같은 조 제4호의 전자금융업자 및 같은 조 제5호의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합하여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 바. 보건의료기관
  - 사. 학교
6.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소관 분야 행정기관"이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아래 각 목 괄호 안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관장하는 각 목의 중앙 또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의미하고, 제28조·제29조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위탁자를 기준으로 소관 분야 행정기관을 결정한다.

가.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온라인사업자·위치정보사업자등)

나. 금융위원회(신용정보회사등·금융회사등)

다.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관)

라. 교육부(학교)

마. 안전행정부(가목부터 라목까지 열거되지 않은 공공기관 및 개인정보처리자)

9.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보호 또는 사생활보호 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체계를 설계할 때부터 개인정보보호 또는 사생활보호가 도모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이 이 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제7조(기본계획)** ①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은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하에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의 활성화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의 활성화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소관 분야 행정기관 사이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항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표준지침 제·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소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

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①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시행 지원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제4호의 자율규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개인정보에 관한 국제기구의 활동 및 국제적 기준 설립에 적극 참여하고 그에 관한 사업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제공

**제13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에 명확히 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의 서비스이용내역·접속기록·결제기록·통화내역 등과 같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고 해당 정보주체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계약 이행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정보주체 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모든 사람에게 목적의 제한 없이 공개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얻는 당해 정보주체 또는 공공의 이익이 현저히 큰 경우에 한한다.
9.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권리와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구체적인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4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란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제1호, 제8호 제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각 업무나 서비스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와 그 외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수집하여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수집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⑤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양도하는 자는 개인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양도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도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58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③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6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제1항제1호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대신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제2항이 준용된다.



1. 법령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이 금지되지 않을 것
  2. 정보주체의 이익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일 것
  3. 동의를 받기 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사이에 문서로 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계약이 있을 것
-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개인정보의 국외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서비스 제공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제공되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이 절에서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미리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고, 제16조제3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집·이용한 자와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제4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이 장 제2절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제공 특례)**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16조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그 정보주체의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16조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매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 등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특례)** ①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이거나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意的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③ 제3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 ④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신용조회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이하 같다)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매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이나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⑦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 ⑧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개인신용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⑨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와 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⑩ 제1항,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21조는 이 장 제2절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제21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공의 조회 및 통지 특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정보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2조(학생교육정보의 제공 특례)** ①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인 학생에 대한 학생교육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학생교육정보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정보주체인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생교육정보를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제2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

**제23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①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법령상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구체적인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제1항제1호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대신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이 준용된다.

④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대신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⑥ 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그 수사가 종료되거나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을 통보한 경우, 지체 없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주요 내용, 이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 제공근거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반기별로 개인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보호위원회를 거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특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주체, 정보주체의 배우자, 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한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 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 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에 한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에 위치한 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경찰관서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요청자
  2. 요청 일시 및 목적
  3.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4.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제2항 단서에 한한다)
-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 제3항에 따른 의사확인,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요청방식 등)** ①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전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요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4조제7항에 따라 경보발송을 하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4조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개인신용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특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신용조회회사는 제4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본조에 한하여 "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한국전력공사법」, 「주민등록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관계 법령이 정하는 공무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기관등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3.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이용·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위하여 이용·제공하는 경우
5.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법관

의 영장을 발부반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이용·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6.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이용·제공하는 경우

7.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대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열람료 또는 수수료 등을 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기관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제3항의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1항제1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받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상법」 제64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경우로서 해당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원권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2. 금융거래계약의 만기 도래, 실효(失効),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 등 거래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처리절차,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른다.

**제27조(개인보건의료정보의 목적 외 제공 특례)** ① 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보건의료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보주



체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정보주체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정보주체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개인보건의료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개인보건의료정보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8.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징병검사대상자의 개인보건의료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개인보건의료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1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이 개인보건의료정보를 보훈병원장에 제공하는 경우
1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경우
12.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개인보건의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② 보건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개인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3절 개인정보의 위탁 등

**제28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제3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법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수탁자·재수탁자 등이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수탁자·재수탁자 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⑨ 위탁자가 제4항의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탁자·재수탁자 등의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행정적 책임을 부담한다.

**제29조(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특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그 업무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다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수집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⑤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분할·상속 등(이하 "영업양도등"이라 한다)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영업의 양도·합병·분할·상속 등의 사실 및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4. 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등 이전에 그 이전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양도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제31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이전 특례)**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30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현재 거래중인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절 정보주체의 동의

**제3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7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수집·이용, 제공 등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제1호, 제3항, 제17조제2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9조제1항, 제35조제1호 및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 업무나 서비스별로 그 업무수행, 서비스 제공이나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업무수행, 서비스 제공이나 계약 체결 및 이행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7항에 따른 반드시 필요한 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개인정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동의 간주)**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 ② 제1항의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성년후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제34조(동의의 철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등의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비스별·개인정보별·처리단계별 등으로 구분하여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2. 철회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수행, 서비스 제공이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제1항의 철회는 정보주체의 대리인(법정대리인 포함)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 ③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할 때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정보주체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회의 절차,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5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3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3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제38조(개인금융거래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금융거래정보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래 각 호의 법률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른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6절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와 파기

**제39조(개인정보의 비식별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연구·분석, 공공정책의 수립, 시장조사, 마케팅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가 재생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와 약정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보유·이용 기간이 경과된 경우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3.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보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정보주체 사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거래관계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6.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로서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기록보존 및 활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매우 큰 경우

4. 파기 사유가 존재함에도 보존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
  5.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예금·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 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보존 사유가 없어진 때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⑤ 구체적인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폐업 시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보건의료정보의 처리 특례)** ①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분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②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보건의료기관은 보관 중인 개인보건의료정보를 관할 보건소에 넘겨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보건의료정보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 제7절 개인영상정보와 바이오인식정보

**제4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제43조(개인영상정보의 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최소 20일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개인영상정보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임을 소명하거나 촬영된 정보주체가 모두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을 다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45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는 제13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54조 및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바이오인식정보의 보관 등)** ① 바이오인식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추출정보 외에 별도로 원본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원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바이오인식정보의 보관, 관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45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

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 접근·취급 권한의 처리단계별·업무별·직급별 차등 부여
  3. 개인정보취급자 및 접근가능한 자에 대한 교육·관리·감독·사후점검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5.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6.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주기적인 점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7.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관리 및 갱신
  8. 개인정보의 출력(전자출력 포함)에 관한 모니터링 및 제한 조치
  9.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10.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 ② 개인정보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르고, 개인금융거래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 정한 사항보다 엄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된다.

**제46조(업무처리기록의 작성·보존·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래의 업무처리내용(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이 포함된 기록을 작성하여 처리 목적을 달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처리를 의뢰하거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성명과 연락처
  2. 개인정보 처리를 의뢰받거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날짜와 마친 날짜
  3. 개인정보 처리를 의뢰받거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내용과 처리 결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업무처리기록은 개인정보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개인신용정보의 관리 특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정보주체는 제20조제8항에 따라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56조제1항·제2항·제7항 및 제60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51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구체적인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40조제2항 각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3. 개인정보 업무처리기록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6. 정보주체·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9.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위치정보사업자등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0.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신용정보회사등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1.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 및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이 있더라도 이 계약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대신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⑤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소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4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책임질 개

인정보 보호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관리 및 보호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의 관리·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임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6. 임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7.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처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끼리 계정을 공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5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평가기준, 영향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⑧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 ②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행기관,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제1항"으로 본다.
- ④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를 준용한다.

**제5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유출사실을 안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된 구체적인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

## 한 정보

###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사실을 안 때로부터 24시간 안에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2항의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초과하는 경우 제1항이 정한 시간 안에 정당한 사유를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문서(전자문서 포함)로써 소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55조(개인정보의 열람·제공)**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2.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현황
3.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이유 및 현황
4.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5.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업무처리기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 또는 제공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료되거나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통보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5호의 업무처리기록에 한함)
  4.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또는 제공 요구, 열람 또는 제공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 그 개인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정정 또는 삭제의 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정정 또는 삭제 중임을 기입하고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 또는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한 개인정보처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개인정보에서 정정되거나 삭제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 ⑧ 제1항·제2항·제4항·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소명자료제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진료기록부등의 정정 금지 특례)** 제5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정청구의 대상이 개인정보의 의료정보가 포함된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료인이 작성·서명한 진료기록부등의 문서인 경우에는 해당 기록을 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정보주체의 정정청구 사실 및 청구내용 등을 해당 문서에 첨가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58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51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55조에 따른 열람·제공, 제5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58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의 요청을 하는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의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열람등요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과 결부된 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개인신용정보의 정정·삭제청구에 대한 불복 특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56조제2항과 제7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이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3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 등 특례)** ① 신용조회회사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주체는 신용조회회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조회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신용조회회사는 명의도용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회에 따른 정보제공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정보제공 중지 및 통지 방법, 통지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구제

### 제1절 단체소송

**제63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85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 결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 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제64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6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66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67조(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가 전문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제66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68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63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제69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 제67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2절 손해배상소송

**제70조(손해배상소송)**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포함, 제71조도 같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상당한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으면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점

2.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또는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정보주체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

②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피해의 전보 또는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제71조(징벌적 손해배상)**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상당한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체 개인정보 중 4분의 3 이상(정보주체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이 분실·도난·유출됨으로써 손해를 입으면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액의 3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70조제2항을 준용하여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송은 소가에 관계없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전속적으로 관할하며, 소송비용은 제70조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④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손해발생사실의 동일함을 소명하여 제1항의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원고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기존 원고의 과반수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써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72조(신용정보회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장 보호위원회와 분쟁조정

### 제1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73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직)**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보호위원회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상임위원은 각 법령정책 업무, 분쟁조정 업무, 보호위원회 사무를 담당한다.

③ 위원장과 분쟁조정 상임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4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4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보호위원회, 제74조의 특별위원회·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그 업무를 통일적이며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둔다.

1. 각 개인정보 소관 분야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며 주요 정책이나 소관 분야 행정기관이 입안한 이 법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개인정보 법령정책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
2.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는 동수로 한다. 다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법령정책 상임위원으로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③ 전문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상임위원으로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 특별위원회·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⑤ 보호위원회 위원, 특별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사이의 겸직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⑥ 전문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전문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특별위원회·전문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5.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에 관한 사항
  6.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7.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제52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9. 제76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10. 제77조에 따른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및 평가기준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11. 제90조제2항에 따른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12. 제93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1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4. 개인정보 보호·법령정책·분쟁조정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1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인정보처리자나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자의 출석 또는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나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관련자의 출석이나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 ④ 보호위원회는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나 절차 등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심의·의결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6조(연차보고서)** ① 보호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현황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
3.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소관 분야 행정기관이 행한 법령 입법·실태조사·행정처분 등의 내용 및 그 통계를 포함한다)
4. 개인정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정책 동향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시책에 관하여 공개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제77조(입법영향분석 보고서의 작성)** ①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상황 및 그 영향을 2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와 법령의 개선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국회는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평가 기준을 보고서 작성 이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국회는 평가 기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평가의 일부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8조(위원의 신분보장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② 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③ 당사자는 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보호위원회 위원장이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④ 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2절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79조(조정 신청 등)**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위원회는 즉시 전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80조(처리기간)** ① 전문위원회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1조(자료의 요청 등)** ① 전문위원회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2조(조정 전 합의 권고)** 전문위원회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3조(분쟁의 조정)**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전문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84조(조정거부 및 중지)** ① 전문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전문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5조(집단분쟁조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전문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전문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8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집단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조정절차 등)** ①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 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 제8장 보칙

**제87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4. 언론의 취지·보도, 종교단체의 선교, 정당의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8조(금지행위)**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9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2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2. 제53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3. 제74조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업무
4. 제7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5. 제75조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제90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①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공공기관은 보호위원회에 그 안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그 안을 소관 분야 행정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제시한 의견을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③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91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상담
  2. 사실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부수한 업무
- ④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의 사실의 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의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92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 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열람할 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계획을 알리지 아니한다.
- ④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열람 또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⑤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3조(시정조치명령 및 시정권고)** ①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안전행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시정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94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②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95조(결과의 공표)** ①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제90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93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94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제96조에 따른 과징금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나 그 외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45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다한 경우 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이후 피해 경감을 위한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감경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3. 제28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4. 제32조제7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5. 제35조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6.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
  7.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제45조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 외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45조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와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 이후 후속조치 이행 여부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⑥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위탁계약을 맺고 거래하는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2



호에 따른 모집인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그 모집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④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9장 벌칙

**제98조(벌칙)**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8조제5항 또는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5. 제35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수집 및 처리한 자
6.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및 처리한 자
7. 제88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8. 제88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8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8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경보발송을 거부한 자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 이송 시 개인의료정보를 이송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2항, 제43조제3항 또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4.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5.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99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8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32조제7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또는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 또는 제32조제6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자
  5.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자
  6. 제36조제2항, 제43조제3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한 자
  8.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0.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11.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2. 제54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조치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13. 제5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14.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6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 이용목적 또는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
  5.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8.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한 자
9.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0.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 또는 제5항,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11.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
12.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46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14.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5. 제54조제3항·제4항, 제55조제2항·제4항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6. 제92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7. 제92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⑤ 제10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96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제12504호, 2014.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990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 및 제100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